

# 지방자치 정책브리프

## 지역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성과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언

### 규제혁신의 필요성

#### 지자체 차원의 규제에 대한 관심 제고 필요

- 최근 경제불황에 따른 불경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중앙정부 차원의 규제혁신 노력에 관심이 모아지는 반면, 상대적으로 지자체 차원의 규제완화 및 혁신에 대한 관심 제고가 필요
  - 지방자치단체 규제와 관련해서는 그 내용이 비현실적이거나 중복되는 규제들이 존재하며, 이에 따라 주민들 생활 및 지역경제에 불편과 부담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

#### 등록된 규제의 수는 중앙정부보다 지방자치단체가 많은 수준

-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규제건수는 중앙부처의 대략 3배 이상이며,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등록규제 건수도 중앙부처 공무원에 비해 약 7배 가량 많이 차지하고 있어, 지방자치단체의 규제 혁신 필요성은 높아지고 있는 상황

### 규제혁신 현황 및 문제점

#### 지방규제혁신의 체감도는 낮은 수준

- 그간 일자리 창출과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지속적인 지방규제 혁신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의 체감도는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판단
  - 행정안전부의 지역 맞춤형 규제개선('14~'17년) : 발굴 11,260건 → 개선 2,476건
  - 행정안전부의 대국민 생활규제 공모('16~'17년) : 발굴 6,206건 → 개선 49건

#### 체감도가 낮은 원인은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것이 주요인

- 체감도가 낮은 이유 중 하나는 규제와 관련된 주요 사항이 중앙부처 규제를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주민접점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규제에 대해서는 시스템 정비가 필요
  - 따라서 지역의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지자체 및 행정안전부의 역할이 불분명하게 규정되어 있어 추진동력 확보에 애로점이 존재할 개연성이 높아 보임

#### 첫째, 지자체 규제개선 청구권의 보장 미흡

- 지자체는 중앙부처에 수많은 규제혁신과 관련된 과제를 발굴하여 건의하여 왔으나, 지자체의 규제개선 청구권 등이 보장되지 않아 중앙부처의 수용률이 낮은 상황
- 2017년도에는 4,500여건의 규제개선 요구가 있었으나, 중앙부처의 수용률은 약 2%에 불과(지자체 주민의 요구 포함), 지자체가 직접 건의한 규제개선에 한정하더라도 약 17% 수준
- 그 결과 주민 및 지역기업이 규제애로를 지자체에 호소하더라도, 지자체가 규제문제에 대하여 책임지고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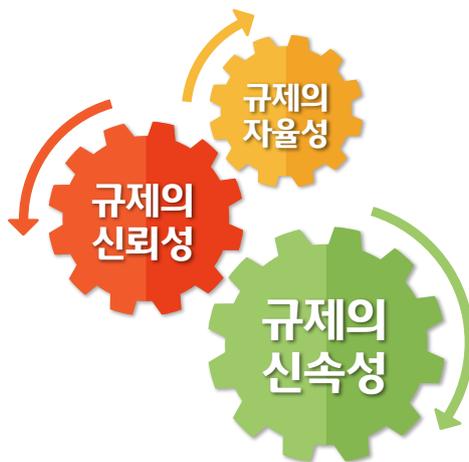
## 둘째, 규제관련 피드백 장기화와 소통창구 부재

- 규제와 관련된 고객(민원인)의 주된 불만은 규제문제의 해결여부를 떠나 행정의 불친절(일종의 업무핑퐁), 피드백 장기화 및 소통창구의 부재도 주요 요인
  - 가령, 수도권 규제,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, 그리고 오픈 카지노처럼 지자체간 이해충돌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 및 해결할 제도적 수단 등이 필요한 실정

## 지방규제혁신 성과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언

### 성공적인 지방규제혁신을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할 가치는 상향식 규제혁신에서 찾아야 함

- 그간 중앙정부 중심의 하향식 규제혁신은 지방자치에 반할 수 있는 요소가 존재하며, 다양한 지방자치단체가 존재하는 가운데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정비해 나가기엔 한계에 봉착한 상황
- 지방자치단체에 규제재량권 부여를 통한 규제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선행됨과 동시에 중앙정부는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역할이 필요한 상황



▣ <그림 1> 지방규제혁신의 성공요인 도출 ▣

### 첫째, 규제의 자율성 측면에서 상향식 규제혁신을 위한 개선과제를 도출해 볼 수 있음

- 현재 모법인 행정규제기본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부여할 수 있는 개정안 마련이 필요
- 지자체별로 상이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규제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 표준조례안 마련
- 규제 신고고객 보호·서비스 현장을 마련하는 개선방안의 제시가 필요

### 둘째, 규제의 신뢰성 측면에서는 기업과 주민에서 규제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간의 긍정적인 규제경쟁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

- 이를 위해서 인센티브 및 평가(합동평가 등)와 관련된 사항의 고려 가능

### 마지막으로 규제의 신속성 측면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온라인 창구시스템을 구축하여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지침 마련 및 절차 개선이 요구됨

- 이를 위해서 규제개혁신문고 설치 운영 및 지방규제 수용률 제고를 위해 절차적 개선방안 모색 가능

▶ 내용문의 : 김건위(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, 033-769-9855, cigma@krila.re.kr)

지번호 보기 : 지방분권시대의 국정통합성 확보방안(김지수 수석연구원)

원문보기 >

✉ 본 메일의 수신을 원하지 않으실 경우 [brief@krila.re.kr](mailto:brief@krila.re.kr)로 회신해주시기 바랍니다.